



# 한·중 FTA대비 오리산업 생존대책 모색 좌담회



글·사진 : 편집부

지난해 말 정부에서 한·중 FTA 협상을 본격 추진 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농업계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오리 시장이자 생산국으로서 국내 오리 산업과 현저한 규모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가 수는 1,200배, 사육수수는 53배가 높은 실정이다. 가격 또한 국내 보다 현저히 저렴한 것이 현실. 더구나 산업 기반이 공고하지 않은 오리산업은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2월 22일(수), 농수축산신문 주관·한국오리협회 주최로 「한·중 FTA대비 오리산업 생존대책 모색 좌담회」를 개최하고, FTA협

상이 오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규모를 가능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아래는 좌담회 지상중계 전문이다.



◎ 주제 : 한 중 FTA 협상 체결시 오리산업에 예상되는 피해와 오리산업 생존대책 모색

◎ 주최 : 한국오리협회 ◎ 주관 : 농수축산신문사

◎ 일시 : 2012. 02. 22.

◎ 참석자

- 좌장 : 길경민 농수축산신문 편집국장
- 이흥철 농림수산물부 서기관
- 김삼수 농협중앙회 가금특수팀장
- 김정주 건국대학교 교수(발표 : 한 중 FTA 관련 연구용역 결과)
-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
- 정정우 한국오리협회 부회장(사육분과위원장)

- 좌장** 중국과 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농가들 분위기는 어떠한지?
- 정정우** 아직까지 농가들은 현실적인 부분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요 몇년 새 오리산업 호황이 계속 이어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계가 어려워지자 농가들도 당황하고 있음. 농가들은 중국 오리산업 현황에 대해 잘 모르는 농가가 태반. 교육 등을 통해 빨리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을 전파해야 할 것
- 이강현** 오리관련 연구 굉장히 빈약. 오리산업이 10년간 급성장 했지만 그 동안 자생적 성장의 한계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0~30% 성장을 이어왔지만 그 사이 AI 등 위기도 컸음. 작년은 오리가격이 역대 최고가격을 형성하는 가 하면 하반기에는 3년내 가장 낮은 시세로 하락하는 등 극과 극을 달리기도 했음. 오리 소비량은 공식 산출하는 곳이 없어 자체적으로 산출하는데 작년 3.1kg 정도로 나타났음. 중국은 오리 최대생산국이자 소비국. 지금은 불행중 다행으로 AI 상시 발생국으로 백신사 용함에 따라 생육 수입이 제한되고 있고 지금은 대만산 냉동육이 조금씩 수입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수입물량 비중은 크지 않지만 문제는 소량 수입할 지라도 그로 인한 오리육 인식 저하 등 간접 피해가 더 문제. 중국과의 FTA 시 가장 큰 문제는 검역의 지역화 문제. 지역화될 경우 국내 오리 사육기반 여지없이 무너질 것.
- 김삼수** 한중 FTA는 오리뿐 아니라 타 축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오리에는 더더욱 그 영향이 클 것.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오리 최대생산국이기 때문. 김정주 교수의 피해 산출액의 2배 이상으로 예상. 왜냐하면 오리산업이 갑자기 급성장해 기반이 덜 잡혀 있기 때문. 생산부터 도압·가공·유통까지 시스템도 미흡. 이러한 상황인데 오리가 민감, 고민감, 초민감 품목 등급 중 가장 하위 등급인 민감품목으로 돼 있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상향조정해서 대책 세워야 할 것
- 정정우** 생산기반이 일반 가축으로 등재된 지 이제 3년. 계획 생산체제 하에 사육시스템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이 대부분. 생산기반이 아직도 매우 열악하나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2006년 폭설 당시 열악한 시설이 무너지면서 많이 개편되었음. 농가의 사육기법도 많이 발전. 아까도 말했지만 농가 측면에서 중국과의 FTA는 전혀 대비가 안되고 있는 상황. 농가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 지회와 지부 활성화 돼서 정보교환이 활발했다면 이렇게 인식이 낮지는 않았을 것. 지금 농가는 대부분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짙음.
- 김정주** 중국은 북경 인근에 농장에 가도 사료를 강제급여하는 방식으로 사육하고 있으며 위생과

복지 측면에 있어서도 한참 낙후. 이러한 면에서는 FTA 체결한다해서 곧바로 국내 오리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 막연하게 피해상황만 추정해서 뚜껑도 열기 전에 오리업계 위축시키는 역기능도 조심해야 할 것.

- 좌장**           마늘 등 양념채소는 벌써 국내 점유율이 50%에 육박
- 김삼수**        90년대 중국산 오리 점유율이 20% 이상이었음. 2000년에 AI 때문에 중국에서 생육 못들어오면서 산업이 급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너무 쉽게 봐서는 안될 것.
- 김정주**        오리는 불포화지방산과 건강식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 중국산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 중국에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훈제 등 검역 및 위생기준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뷔페 등 단체 식당에 중국산 저급 오리가 많이 납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정부차원에서 특별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
- 이흥철**        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 정부에서 계열화 사업강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오리계열화는 약 99% 정도로 보고 있다. 최근 산지 시세가 많이 하락돼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F1 오리로 인한 과잉이 문제시 되어 전국의 종오리 농가 등을 집중점검·지도하고 있음. 오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육계보다 앞서 나가고 있음(자체 수급조절, 정화 노력 등) 중국의 경우 계열업체 위탁농가가 호당 70수 정도 사육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계열화집단이 수출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곳들이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한중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바로 큰 피해가 닥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
- 좌장**           중국이 유사시 때 수출 규제정책으로 전환. 그래도 중국은 물량이 엄청나 중국산 오리 수입이 국내 수요 대체 우려 있음.
- 이강현**        지금 정부에서 한중 FTA 관련 민감품목 3단계 설정했는데 오리가 가장 하위. 사실은 오리가 수입개방 가장 먼저 된 품목. 과거 중국산 냉동육이 국내 오리시장의 20~30%를 차지. 우리가 농식품부에도 민감품목 상향조정을 요청한 바 있음. 언론도 많은 관심가져주시기를 바람. 지금 정책적으로 작년부터 통계청, 축산관측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당시 수입량이 적어 안된 다는 견해도 많았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최근에는 국내산 오리 인증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우선 도매·가공 단계부터 국내산 오리 인증사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소비는 작년에 상반기 부족사태가 발생하다보

니 F1 물량 입식증가해 과잉. 그것이 하반기에는 엄청난 재고로 적체. 최근 약간씩 풀리고 있는 상황이나 법적 제도 강화 필요.

지금은 위반 시 과태료 너무 적음. 형식적이고 현실성 없다는 지적. 거기에 지자체도 과태료 잘 부과하지 않으려고 함. 2008년 8월부터 오리 군납 시행하고 있는데 초기보다 물량이 삭감되었음. 수입 소고기 비중을 줄이더라도 오리고기 비중을 좀 더 늘렸으면 함.

좌장

1인 1g 늘리는 것이 8천수 가량. 쉽지는 않은 일임.

이강현

인증사업 금년도에 도입·가공·유통 중심으로 중점 추진. 혈통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법적 장치도 필요. 오리 축사시설이 매우 열악. 이러한 부분도 보완 필요. 농장 HACCP이나 친환경 오리 직불제도 육계 2배로 임의 책정. 다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 농민들 반발이 큼. 적절한 기준으로 개정 필요.

정정우

우리는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만 5천수 이상 사육해야. 축사는 기본 1,500평 이상이어야 하지만 닭은 그 면적이 필요 없음. 축사시설현대화 하려면 산으로 자꾸 들어가야 하는 상황 발생. 현대화시설 자금이 우리가 가장 저조할 것. 계열에서 모든 키를 쥐고 있음. 최소 6회전을 해야 함에도 4회전 하면 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움. 사육은 당연히 계열업체들 눈치를 보게 되는 맹점이 발생. 실질적인 지원 면에서 오리 쪽에는 혜택 없다고 봄.

HACCP, 친환경도 다른 축종은 먼저 직불금보조라는 미끼를 주고 유도한 것. 우리는 그나마도 늦게 합류해 순번이 한참 밀려 있어 받지도 못함. 혜택은 소, 돼지 등 타축종이 다 받고 있음 직불금 자체도 타 축종과 형평성 안맞음. 현실적으로 조정이 절실

김삼수

육계도 계열주체와의 갈등 심함. 오리도 분명히 있을것. 중국과 미국도 모두 계열과 농가 사이 갈등이 큼. 오리산업도 협동조합이 없는데 농가 스스로 조합 등 결성이 필요.

오리조합이 있어야 농가도 권리를 찾을 수 있고 크게 성장 가능.

정정우

오리조합 하려고 지난해 시도도 해 봤지만 계열유통업체와의 관계와 시스템이 있어 실질적으로 어려움. 그러나 앞으로 조합 설립 등 그런 방향으로 발전 필요.

김삼수

오리산업 더 커질 것.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함. 육류 소비량이 2050년에는 지금의 2배가 될 것이라고 함. 수출 등 시장개척 등도 적극 노력해야함. 조합 육성과 수출시장 개척, 의무자조금 도입 등이 필요. 자조금도 뉴질랜드의 경우 부회장에서 일괄 거출해서 실시.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검토해 보아야 함. 또한 오리 가정소비

도 5% 이하인데 10% 이상으로 늘려야 함

- 좌장** 농민들의 참여 강화 등 필요. 필요충분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할 것.
- 김정주** FTA 통상국은 농업에 관심 없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민감품목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요청해야 할 것. 실제 사례가 있는 만큼 전혀 말이 안되는 얘기는 아닐 것. 또한 저율할당관세를 늘리거나 세이프가드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계열업체와 농가 문제도 우리는 조용하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 할 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수준. 단지 지금은 농민들이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상황일 뿐. 미국은 농민을 보호하는 법이 잘 마련돼 있음 그러한 제도적 장치 필요. 최소한 부당하게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장치는 꼭 필요. 농가측면에서는 기술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 마지막으로 농민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 이강현** 본격적으로 의무자조금 추진키로 자조금 위원회서도 의견이 모아졌음. 오리 조합부분은 계속 연구해서 산업 발전을 이룰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 FTA 대비책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
- 정정우** 지회와 지부 활성화 해 농가도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나갈 것.
- 김삼수** 오리산업은 농업품목 중 6위. 기틀 세워져야할 것. 오리고기가 웰빙바람으로 급성장한 만큼 이 성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오리 협동조합도 설립해 파이를 키워나가야 함. 국내산 오리육 가격이 중국산보다 2.3배 정도 높음. 가격 경쟁력도 갖춰야 하며 시설현대화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결이 시급
- 이흥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리사육농가들이 어려운 실정. 무허가 축사 문제와 비닐하우스 시설 등을 정상적인 축사시설로 전환토록 정부도 계속해서 힘 쓸 것. 오리고기 품질과 안전, 위생성 지속관리 필요.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오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농가들도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집중 관리할 것. 축산계열화법 공포됐지만 1년 후 정식 시행될 것. 모범 사업자들에 필요자금 지원하고 계열 농가 애로사항 해결조정 방안 마련 등 농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음.